

I. 最近 景氣 診斷

- (現 況) 국내 경기는 본격적인 回復 局面에 進入
- (問題點) 국제수지 악화와 물가 불안, 景氣의 兩極化라는 문제가 부각
- (政策 方向) 호경기의 지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經濟 體質 改善이 절실

- (焦 點) 국제수지 악화와 물가 불안, 景氣의 兩極化라는 문제가 부각
- 국내경기는 본격적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서 각종 경제 지표의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첫째, 경기 양극화 현상과 어음부도율의 증가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기업의 경기는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은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산업 구조 조정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도 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국내 산업간의 전후방 효과가 낮아 몇몇 업종의 활황이 여타 산업으로 확산되지 않음을 나타냄.
 - 둘째, 국제수지 악화임. 경기 상승이 자본재와 소비재의 수입 증대로 곧바로 연계되고,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해외 여행의 증가로 경상수지가 크게 악화되었음.
 - 셋째, 경기 상승에 따라 빚어지는 물가 불안과 인력난이 호경기의 지속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政策 方向) 호경기의 지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物價 安定 追求
- (經濟 安定化) 총수요 관리에 기초한 물가 안정에 경제 운영의 중점을 둘 방침임.
 - (成長 潛在力 擴充) 95년도 예산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농어촌, 중소기업 같은 취약 부문에 우선 배정할 방침임.

(提 言)

- (經濟 體質 強化 提言)
- 첫째, 競爭 體制의 強化
 -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이 약화된 주요인 중의 하나는 경제 각 부문에 대한 정부의 규제·개입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자생적 노력이 훼손되었다는 점임.
 -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한 정부의 첫번째 노력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 여건을 마련하는 것임. 이를 위해 각종 규제(가격 통제, 금융 규제, 신규 산업 진입 규제, 사업 영역 규제 등)를 완화하는 대신에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둘째, SOC 擴充과 物流 體系 改善
 - SOC 확대와 물류 체계 개선은 성장 잠재력의 확충과 장기적인 물가 안정을 위

해서는 필수적 요소임.

- SOC 확대가 단기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민간 참여로 민간 투자 수요를 대체시키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함.
- 민자 유치가 불가능한 부문에 대한 투자는 정부가 주도하되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셋째, 市場 開放과 資本自由化의 擴大
 - 시장 개방과 자본자유화의 확대는 단기적으로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자구 노력과 자금 조달 비용의 절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임.
 - 또한, 시장 개방의 확대는 가격 파괴(가격 급락)를 통해 물가 안정과 국민의 후생 수준 증진이라는 효과를 미칠 것임.
 - 정부는 시장 개방이 무분별한 소비 수요의 창출로 이어지거나 자본자유화가 비생산적인 '머니 게임'으로 연계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短期 政策 提言)

- 첫째, 단기적인 경제 정책의 방향은 自律化·開放化가 물고 올 단기적인 마이너스 효과(한계 기업의 도산, 통화 팽창)를 최소화하는 데 焦點이 맞추어져야 할 것임.
- 95년도에 예상되는 막대한 외자 유입으로 통화 창출을 억제할 것인데, 이 상황에서 안정화 정책의 추구는 자칫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 및 중소기업의 자금 압박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임.
- 따라서, 통화 정책은 총통화 증가율에 집착한 경직적 통화 관리에서 벗어나 시장 상황을 고려한 신축적 관리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재정 지출의 시기 조절을 통한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임.
- 둘째, 景氣 上昇 基調를 持續시켜야 함.
 - 현재의 경기 상승은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기저에는 수출 호조를 밑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수출에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 경기 흐름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음.
 - 수출의 지속적인 호조를 위해서는 환율·임금·금리의 안정이 중요함.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의 방향은 상기 요인들의 움직임을 고려하면서 시행되어야 할 것임.
 - 특히, SOC 투자 확대가 민간 건설 경기의 상승 기초와 맞물리면서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셋째,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경기 변동(political business cycle)을 예방해야 함.
 - 95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농어촌·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지방단체장 선거와 연계되어 집행될 경우, 통화 관리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인 자금 지원보다는 구조 조정을 감안한 간접적인 지원의 형태를 취해야 할 것임.

(이 영 수)

II. 主要 政策 懸案에 대한 提言

1. 大企業 政策

- (焦點) 업종전문화 정책과 상호출자제한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爭點) 업종전문화 유도와 상호출자제한 정책은 規制 緩和 政策과 矛盾
 ○(提言) 공정거래제도는 규모보다는 경쟁 환경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함.

(焦點) 업종전문화 정책과 상호출자제한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 신정부의 대기업 정책의 기초는 기존의 공정거래제도에 업종전문화 정책과 상호출자제한제도가 첨가된 형태임.
- 이는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기업간 또는 기업과 소비자간의 공정 거래를 촉진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 최근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경제력 집중억제 정책을 공정거래법 체제로 일원화하는 등 기존의 대기업 규제 정책을 현실적으로 운용하려는 움직임은 진일보한 정책임.

(爭點) 규제 완화에 모순되는 非一貫的이고 非現實的 政策

- 현재 실시중인 인위적인 업종전문화 정책은 기업간 자율적 경쟁 환경을 조성하지 못함으로써 경제력 집중 완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규제 완화의 추세에 역행하는 경향이 있음.
- 대기업집단의 상호출자제한 폭의 확대도 자칫하면 대기업집단내 첨단 모험기업(venture capital)의 등장을 가로막는 정책이 되어 버릴 수 있음.
- 정부의 정책 기초에 일관성이 결여되었음. 예컨대, 정부는 일부 부실기업의 합리화 조치, SOC의 민간 참여, 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방지책을 펴는 등 다소 상충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음.

(提言) 기업간 경쟁 활성화를 통한 경제력 집중 완화와 국제경쟁력의 제고

- 업종의 다각화와 전문화의 선택을 대기업에게 맡기고 경쟁제한적 정책을 지양해야 함으로써 기업간 경쟁 환경을 보장해야 함.
- 공정거래제도는 규모나 비중보다는 효율성이나 경쟁 제한 폐지라는 차원에서 적용되어야 함.

(전 병 유)

2. 物價 政策

- (焦點) 人爲的인 價格 抑制과 수요 통제 등으로 부작용 누적
 ○(政府 立場) 工產品의 가격 안정을 통한 物價 安定化 추진
 ○(提言) 價格의 市場 調節 機能 回復과 需給 調節 能力 擴充이 時急

(焦點 및 問題點) 人爲的인 價格 抑制과 緊縮 通貨 政策으로 副作用 累積

- 첫째, 價格의 市場 調節 機能을 무시한 채 米市적으로는 價格통제나 價格권고와 같은 人爲적인 價格규제 政策을, 거시적으로는 긴축 通貨 政策을 실시하였음.
- 둘째, 수급 전망 차질과 적절한 수입 시기의 失機로 수급 조절 政策에 실패했음.
- 셋째, 공급 및 비용 측면의 고비용-저효율에 기인한 물가 상승 요인을 수요 억제로 해결함으로써 '진단 따로-처방 따로'의 모순된 政策을 실시하였음.
- 넷째, 5년 단위의 물가지수 변경, 지수관리 위주의 물가 政策으로 일부 다소비·다빈도 품목의 지수 반영이 미흡하여 체감물가와 지수물가간의 괴리가 확대되었음.

(政府 立場) 工產品의 價格 安定으로 物價 管理 方針

- 개별 품목 관리에서 수급 조절 政策으로 전환하고,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은 매우 진일보한 정책임.
- 그러나, 공산품과 서비스제품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자본 시장 개방과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인프레 압력을 긴축으로 억제할 것이라는 기존의 政策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임.

(提言) 價格의 市場 調節 機能 回復과 需給 調節 能力 擴充이 時急한 課題

- 물가 상승 요인을 人爲적으로 억압·누적하기보다 價格의 市場 調節 機能을 회복, 가격 변동 요인을 점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인상 요인을 분산시키는 대책이 필요함.
- 물가 지수 산정 기한을 3년으로 단축하고,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계절성(절기) 반영도를 높혀 체감물가와 지수물가의 괴리를 축소시켜야 함.
-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수급 조절 능력을 배양해야 함.
 - 공영도매시장의 확대와 역할 제고, 상품 的 규격화와 SOC 확충을 통한 물류 비용 축소, 기상 관측 능력의 제고와 유통예고제 정착 등
- 국제 유가 변동의 완충용으로 설립된 석유안정기금의 轉用을 중지, 설립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용하며, 선물 관련 전문가 육성에 대한 政策적 배려가 요망됨.
- 생산요소 비용의 안정으로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적 인프레 압력을 해소해야 함.
 - 신축적인 통화 공급과 해외자금 조달의 가용성 증대, 기업 的 임금 협상력 확대

(홍 순 직)

3. 通貨・金融 政策

- (焦點) 資本自由化의 擴大에 따른 通貨 管理의 어려움 加重
- (政府 立場) 通貨・金融 政策이 通貨量 위주의 通貨 管理에만 依存
- (財界 立場) 金利의 下向 安定化와 民間 與信 縮小 止揚 要望
- (提言) 資本 流入의 副作用 防止을 위한 多角的인 努力 必要

(焦點) 資本自由化의 擴大에 따른 通貨 管理의 어려움 加重

- 자본자유화의 확대에 따라 해외부문의 통화 공급 증가가 확대되고 있음. 이는 통화 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특히 민간부문의 여신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
- 해외 자본의 유입 증대와 이에 따른 통화 증발 억제 대책으로 원화의 절상과 금리의 상승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무역수지의 적자를 확대시키고 자본 유입을 증대시키는 악순환을 보일 수 있음.

(政府 立場) 通貨 政策이 通貨量 爲主의 直接 規制 方式에만 依存

- 자본 및 외환자유화가 확대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도 통화·금융 정책은 통화량 위주의 직접 규제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財界 立場) 金利의 下向 安定化와 民間 與信 縮小 止揚 要望

- 자본 조달 비용의 감소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리의 하향 안정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임.
- 자본 유입의 확대가 민간 여신의 축소로 무리하게 연결되지 않도록 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임.

(提言) 資本 流入의 副作用 防止을 위한 多角的인 努力 必要

- 금리의 시장 가격 기능을 회복시켜야 함. 투자 자금의 배분도 금리의 시장 조절 기능에 맡겨야 하고 정부의 통화·금융 정책도 금리 중심의 간접 규제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
- 외환 및 자본자유화에 따른 통화 관리 애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함.
- 늘어날 외화 유입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해외 투자 등으로 생산적인 자본 유출을 유도하여, 환율 절상 압력에 대처해야 함.
- 자본자유화에 따라 효율적인 통화 정책을 펴기 어려워지므로 경기 조절 정책도 재정 정책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음. 재정 정책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흑자 재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임.

(김도균)

4. 金融專業企業(家) 育成

- (焦點) 금융기관의 소유구조개선 위한 銀行法 改正案 국회 상정 예정
 ○(政府案) 同一人 持分 限度 하향, 산업자본의 金融 支配 源泉 封鎖
 ○(財界 立場) 金融專業企業(家) 요건의 심사에 대한 透明性 提高 필요
 ○(提 言) 인위적인 조정은 가능한 지양하고, 책임 경영을 위한 은행장
 選출의 開放的 公正 競爭 體制 定着 필요

(焦點) 銀行 所有 構造 改善案 確定

- 정부는 금융기관의 소유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한 「銀行法 改正案」을 10월에 국회에 상정하여 95년에 시행하기로 함.

(政府案) 同一人 持分 限度의 下向 調整으로 産業 財閥들의 金融 支配 源泉 封鎖

-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8%의 동일인 소유구조 한도를 4%까지 하향 조정하는 한편, 純粹金融資本(金融專業企業家)에 대해서는 12%까지 예외를 인정해 寡占 大株主를 중심으로 한 경영 방식을 유도하고자 함.
- 특수은행, 국책은행, 지방은행을 제외한 7개 시중은행에만 은행 지분의 12%까지 소유하는 금융전업기업(가) 제도를 도입하고 30大 자본 기업 계열주와 그 특수 관계인들은 금융전업기업(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財界 立場) 金融專業企業(家) 認定에 대한 透明性 提高 必要

- 금융전업기업(가) 요건의 판정상 은행감독원장의 自意的 解釋 소지가 다분함.
- 금융전업기업(가)의 대상에 30大 자본기업의 참여를 불허하고 있음. 자본그룹의 경우 순위 변동이 빈번히 일어나므로 특히 순위 30위 근처에 있는 자본그룹은 비금융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전업기업(가)가 되기 위해 순위 변동을 변칙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에 대한 방지책이 없음.
- 시중은행 지분의 8% 보유가 허용된 기관 투자가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함.

(提 言) 責任 經營을 위한 銀行長 選出의 開放的 公正 競爭 體制 定着 切實

- 금융자율화의 근본적인 취지와 역행하여 금융전업기업(가) 육성을 위한 무리한 인위적 조정 조치는 피해야 하며, 이 보다는 사후 감독 기능의 강화가 필요함.
- 책임 경영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경영 자율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능력있는 금융인이 경영인으로 발굴될 수 있는 개방적 공정경쟁체제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함.

(김 난 주)

5. 南北韓 經濟 協力

- (焦點) 政策 混線에 따른 經協 부진과 외국 기업의 북한 진출 러시
- (爭點) 남북 경협 문제가 政治的 論理에 크게 좌우
- (展望) 北美 회담 타결로 經協의 本格化 예상
- (提言) 柔軟하고 신중한 對應 姿勢 필요

(焦點) 사회내 세력간 견해 차이에 따른 政策 混線과 經協 不振

- 金日成 사후 벌써 석달이 넘게 지났으나, 南北간의 경제 협력은 핵문제라는 정치적 이유로 인하여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
- 핵문제의 완전 해결 전까지는 남북 경협을 不許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음.
- 한편 對北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내 세력들간의 見解 差異로 政府의 남북 경협 政策은 混線을 빚어 왔음.
- 보수-강경 세력들은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없이 어떠한 형태의 경제 협력도 불가하다는 매우 경직된 주장을 하고 있음.
- 한편, 재계와 온건 중도 세력들은 政經 分離 原則에 의거한 經協 強化를 바라고 있음.
- 이러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미국을 위시한 外國 企業들은 북한 진출에 매우 의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다가는 우리 기업들이 북한 진출의 主導權을 외국 기업들에게 빼앗길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

(爭點) 南北 經協 強化의 政治的 論理의 問題點

- 남북 경협을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協商 카드로 사용하자는 핵-경협 연계론자들의 논리는 핵문제 해결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면 모를까, 핵문제가 미국과 북한에 의해 해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설득력이 적음.
- 핵문제 해결을 통한 긴장 완화라는 것이 일순간의 '事件'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는 '過程'임을 중시한다면, '先 핵문제 완전 해결, 後 남북 경협'이라는 전략은 지나치게 경직된 사고임.
- 남북 경협의 강화는 政經 分離의 원칙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유에서도 강화되어야 할 것임.
- 북한의 開放과 改革은 세계사적 흐름이며 장기적으로 꼭 실현되겠지만, 우리가 이를 強壓的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은 아님.

- 따라서, 핵-경협의 절대적 연계 정책을 통해 북한의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기 보다는, 경협을 강화를 통해 漸進的인 緊張 緩和와 平和 定着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현명하다고 판단됨.

(展 望) 北美 會談 妥結로 經協의 本格化 豫想

- 정부 외교팀의 입장도 이러한 유연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서 매우 바람직함.
- 정부가 핵-경협의 고리를 끊지 못했던 내면적인 이유는 적절한 名分을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됨.
- 이번 北美 고위급 회담의 결과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경협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提 言) 柔軟하고 신중한 對應 姿勢 必要

- (政 府) 經協 支援 方式에 있어서 보다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임.
- 과거처럼 정부가 앞장 서서 민간기업의 대북 진출을 모두 통제하려고 하기 보다는 기업의 진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문자 그대로 '支援'에 주력해야 할 것임.
- (企 業) 민간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長期的 思考와 신중한 대처 태도임.
- 단기 이익에 민감한 기업의 속성상 당분간 위험부담이 적은 단순 교역이나 위탁 가공 교역에 중점을 두는 것은 당연함.
-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소 위험은 있으나 남북 경제 통합을 통한 통일이라는 巨視的 目標에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같은 대규모 합작투자에도 눈을 돌려야 할 것임.
- 기업들 스스로가 장기적, 거시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한 반대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임.

(김 욱)

6. 産業 政策의 方向

- (焦點) 뚜렷한 산업 정책의 방향 부재로 産業 政策에 대한 不信 加重
- (政府 立場) 규제 완화와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大企業 規制를 並行
- (財界 立場) 피부에 닿는 규제 완화, 확실한 原則에 의한 政府 規制 요망
- (提言) 競爭力 強化에 焦點을 두는 산업 정책이 필요

(焦點) 뚜렷한 産業 政策 方向의 不在로 産業 政策에 대한 不信 加重

- 일련의 산업 정책이 경제력 집중 완화를 겨냥한 것인지 경쟁력 제고에 있는지 목적이 불분명하며, 두 가지 목적중 어디에 더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사안별로 적용 기준이 다름.
- 이와 같은 산업 정책 방향의 混線은 기업들에게 산업 정책에 대한 不信을 深化 시키면서 政策 效果를 半減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政府 立場) 規制 緩和와 經濟力 集中 緩和를 위한 大企業 規制를 並行

- 국제화와 개방화 추세에 발맞추어 정부도 산업 정책의 초점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개입의 축소와, 민간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市場 經濟 原理의 活性化에 두고 있음.
- 다른 한편 정부는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서 업종 전문화를 비롯한 대기업 규제 정책이 필요하고, 신규 진입에 대해서도 중복 투자, 과당 경쟁, 경제력 집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봄.

(財界 立場) 피부에 닿는 規制 緩和와 확실한 原則에 의한 政府 規制를 要望

- 재계는 규제 완화가 대폭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기업 활동에 중요한 진입·투자, 자금 조달, 가격 책정 등의 분야에서 정부 규제는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음.
- 따라서, 재계는 정부에게 경제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특히 경쟁력 강화와 관련되는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필요한 규제는 강력하게 집행하는 원칙이 뚜렷한 산업 정책을 요망하고 있음.

(提言) 競爭力 強化에 焦點을 두는 産業 政策이 필요

- 정부는 UR 이후 무한 경쟁에 대비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폐지하는 데 역점을 두는 초점있는 산업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이런 견지에서 진입 제한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대폭 풀고, 이와 더불어 교육, 사회간접자본 등 산업 지원 분야와 토지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채영배)

7. SOC 建設의 民資 誘致

- (焦點) 事業審議委의 구성상 사업 심의와 승인시 官主導性 농후
 ○(問題點) 추가 발생 비용과 차입 비용의 불인정 등 事業 費用 認定 範圍가 非現實的
 ○(提言) 審議委의 민간 위원 증가에 의한 官主導的 性格의 약화 및 사업 비용 인정 범위 擴大 요망

(焦點) SOC 投資 財源 補充과 민간 경영의 효율성 활용이 기대되나, 여전히 강한 官主導的 性格이 강함.

- 정부의 민자 유치 계획은 부족한 SOC 투자 재원을 민간 부문에서 메꾸고 SOC 관리에 민간 경영의 효율성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 그런데, 대형 사업과 규모가 큰 부대 사업에 대해 심의 및 사업 승인 결정 권한을 지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으로 볼 때 정부 주도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함.
- 위원회의 구성이 경제기획원 장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장관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5인의 민간 위원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위원회의 회의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임.

(問題點) 사업 비용 인정 범위의 現實性 不足

- 도로, 항만 등 제1종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 수립 단계 이후 설계 변경 등으로 늘어나는 비용 증가분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는 건설 기간의 장기성에서 오는 완벽한 예산 추정의 어려움을 고려치 않은 비현실적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또한, 借入 費用을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는 점도 기업의 투자 재원의 한계성을 고려치 않아 민자 유치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提言) 官主導的 性格 弱화와 사업 비용 認定 範圍의 擴大 要望

- 事業審議委의 민간 위원수를 최소한 10명으로 늘려 관주도성 불식
- 사업을 신청한 어떤 기업도 예측 못한 불가피한 추가 비용 발생시 인정
- 차입 비용을 불인정하기보다는 총사업비중 차입 비용의 비중을 일정 비율로 정하여 인정함으로써 실제로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

(김 선 덕)

8. 公企業 民營化

○(問題點) 공기업 민영화는 引受 企業에 대한 特혜와 참여 기업 제한과 같은 새로운 문제점 부각
 ○(提 言) 공기업의 國民 企業化, 은행 경영의 客觀的 틀 마련 요망

(焦 點) 공기업 운영의 效率化 追求와 작은 政府의 指向

- 공기업 경영권의 민간 이양에 의한 공기업 운영의 효율성 추구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정부의 경제 목표에도 부합됨.
- 또한, 작은 정부 지향과 민간 주도의 경제 운영을 꾀하는 정부 의지 표출

(問題點) 인수 기업에 대한 특혜와 참여 기업 제한

- 공기업 규모로 보아 대부분의 인수업체들이 대기업일 수밖에 없어 기득권자가 공기업의 독과점적 기득권을 획득하게 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三星이 한국비료 인수후 주가 폭등으로 큰 이득을 보았듯이 대기업의 공기업 인수는 기득권자에게 부가적 혜택을 가져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켰음.
- 또한 대기업의 공기업 인수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정부의 또다른 정책 목표를 무색하게 함.
- 은행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정부가 산업 자본의 금융 자본 지배를 막아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 은행 경영의 효율화를 추구한다는 취지는 공감함.
- 그러나, 소위 金融專業化의 명목으로 의도적으로 참여 기업을 제한하면 이는 정부의 규제 완화 시책에 역행하여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크게 손상해치게 됨.

(提 言) 공기업의 國民 企業化, 은행 경영의 客觀的 틀 마련 요망

- 국민 다수의 복지 증대라는 공기업 본래의 취지를 살려 민영화 이전에 정부 보유 주식의 상당 부분을 일반에게 공개 매각한 후 최소한의 경영권 행사 가능한 주식을 기업에 매각하여 완전 민영화 추진. 이럴 경우 중소기업도 참여 가능하게 되어 형평성의 문제도 완화될 수 있음.
- 은행 민영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로 볼 때, 은행장 선출의 공정 경쟁 체제 마련, 특정 기업에의 여신 집중 방지용 제도적 장치, 경영권 행사와 무관한 장기 안정적인 주주층 형성 기준 등의 객관적 틀을 마련하여 매각 은행을 사실상의 공영화를 유지해야 함.
-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공기업의 사업 부문중 경쟁 체제 구축이 가능한 경우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유도해야 함.

(오 성 중)